

미래의 가족·아동 문제 및 사회적 지원체계

조 성 연 (호서대학교 아동학전공)

21세기의 정보화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져감에 따라 가족은 동성애 가족, 동거가족, 편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독신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가치관의 대립과 가속화된 전통적인 가족 제도의 해체 등으로 가족의 위기라고 할 만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은 신속한 적응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남녀의 초혼연령의 상승,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핵가족화의 가속화, 의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가족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자는 변화해가는 사회에 발맞추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가족 및 아동과 관련된 현안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래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이혼 인구수의 감소이다.

현대 젊은 여성들은 결혼은 선택이고 취업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문제로 떠오른 것이 출산율의 감소이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관련된 고용기회의 확대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 독신남녀의 증가(2000년 30대 남자의 미혼율은 16.8%, 25~30세 55.6%(중앙일보, 2001. 9. 26)), 초혼연령의 증가(2000년, 남 29.1세, 여 26.3세), 무자녀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비롯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인구동태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42로서 1970년의 4.53에 비해 30년만에 3분의 1로 현저하게 격감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인 1.5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유지해온 출산통제 정책의 결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노인 부양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되어 인구정책을 기존의 “출산억제형”에서 “출산제고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거나 급격한 저하를 막을 “신인구정책”을 시행키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중앙일보, 2001. 7. 12).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을 중

장기 정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출산율의 감소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금년에 모성보호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출산휴가를 기존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으며, 고용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만 1살이 안되는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 급여로 한 달에 1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급여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어서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2세 이하의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가운데 가족 도움을 받는 비율이 연령대별로 45.2~68.7%에 이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연령대(3~5세)에서도 그 비율은 20.5%나 된다(동아일보, 2001. 2. 6). 이는 적극적인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라 할 것이다.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가족복지정책, 자녀수에 따른 현실적인 세제혜택 및 학자금 세액 공제,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아동보호수당 지급, 현실적인 유급의 모성 휴가 확대 및 육아 휴직제의 활성화, 산전·산후의 유급휴가 확대 실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정책으로서 영아 전담의 양질의 보육시설의 확충과 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교육 및 이의 확대 실시와 보육료 감면, 1세미만의 영아를 둔 취업여성들을 위한 직장탁아시설의 활성화 및 모유 수유를 위한 공간 마련,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 질병 아동의 보호를 위한 유급 휴가 실시 및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한 병원비 지원, 서민 주택 보급율의 확대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처럼 출산장려금의 지급 등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한 예로 스웨덴은 출산 후 1년간 부모 중 한 명이 휴직하고 급여의 80~90%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이 8세가 될 때까지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New Angel Plan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출산율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하여 2004년까지 전국의 만 5세아의 원비를 지원하겠다는 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추후 정책 실시 방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출산과 관련하여 아동 및 여성 건강에 이로운 모유수유율 의 급감이다.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1970년 99.7%이던 것이 1978년 42.8%, 1981년 28.5%, 1997년 14%로 격감하였으며(조성연, 2001: 243), 2000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10.2%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냄으로서 중졸 이하인 경우 20%, 고졸은 11%, 대졸 산모는 8%로 나타났다(KBS 뉴스, 2001. 5. 6).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1997년 14%이었을 때, 유럽이 75%, 미국이 52%, 브라질이 42%이었던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처럼 모유수유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가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

한 모유수유 공간의 확보 및 직장 탁아시설의 확충안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김기남 교수(충북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모유수유는 연간 182만원을 절약함으로써 가계 지출 경감의 효과(중앙일보, 2001. 5. 21)를 지닐 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결과 여성의 산후 회복의 촉진 및 유방암과 난소암 발생률도 감소시키고, 아동의 성장 발달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측면에서는 모유 수유 아동이 인공 수유 아동에 비해 지능이 더 높고(KBS 뉴스, 2001. 8. 22), 모유 수유 아동이 조제분유를 먹은 아동에 비해 과체중이 될 위험이 현저히 낮으며(SBS 뉴스, 2001. 5. 16), 모유 수유 아동이 편식의 위험이 적고, 부정교합의 사례도 더 적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 연간 4000만원에 불과한 모유수유 홍보예산을 확대하여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조제분유의 광고가 전면 금지된 것과 관련하여 아직도 교묘하게 분유광고를 하는 회사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균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서구사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고령 인구의 부양을 가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 이후 5년 사이에 노령 인구는 27.7%가 증가한 반면, 15세 미만은 5.8% 감소되었다. 그에 따라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미래 사회는 고학력노인,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노인비율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노인만으로 구성된 핵가족화의 진전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인구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3세대 이상의 가구는 30.8%로 5년 전보다 감소하였고, 자녀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 노인비율도 50% 내외에 달하고 있으며, 혼자사는 노인 가구도 16.2%(중앙일보, 2001. 9. 26)에 달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전통적인 3세대 가족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노인만의 가구 구성에 대해 박재간(2000: 16)은 2010년에는 그 비율이 70%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 전체가 노인 부양을 분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최소한의 기초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생활보호수준의 향상, 국민 연금의 재원 확충, 경로연금제도와 노령수당제도의 현실화 및 확대, 노인취업기회의 확대, 노인 재산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 예금 생활자에 대한 금리 조정), 노인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체계의 개발(예방적 차원의 보건사업 전개, 만성질환

환 중심의 의료체계 개발), 장기보호서비스의 내실화(시설보호 수준의 향상, 재가보호 서비스의 확충, 노인 전용 임대아파트나 노인주거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주택정책 실시),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 생애를 통한 노년기에 대한 예비교육의 강화, 노부모 동거가족 지원정책의 강화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노인들이 빈곤, 질병과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이다. 실제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중 하나라도 받고있는 노인은 8.3%에 불과(동아일보, 2001. 8. 28)하며, 무료든 유료든 노인들의 모든 시설 입소율은 1999년 현재 0.4%로서 선진국의 2~7%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통계청, 2001)이다.

이와 같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령화 사회와 관련하여 20년 후에는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므로 그 안에 국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복지과 성장을 균형있게 추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하며,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남녀 차별에 대한 생각을 없애면서 여성 고용의 기회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정년 퇴직 제도도 개선해서 고령 노동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임금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일에 대한 가치와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넷째,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현상의 가속화와 그에 따른 미성년 아동보호의 문제이다.

한해 인구 1천 명당 결혼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1999년 현재 7.7로 1970년(9.3) 이후 가장 낮았던 반면, 이혼은 계속 늘어나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5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0.4)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서, 작년 한해 하루평균 915쌍이 혼인하고 329쌍이 이혼하여 한해에 12만 쌍이 이혼한 결과이며, 이로 인해 생겨난 이혼자녀는 10만여 명이나 된다. 부모의 갑작스런 이혼이 “의존적 가족구성원”인 아동에게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측 부모가 무책임하게 양육권을 포기한 “고아 아닌 고아”까지 급증하고 있다. 서울 시립아동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보육원 등에 위탁된 아동 중 30% 이상이 부모가 생존해있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국 270여 개 보육시설에 수용된 1만 7천 명중 최소한 5천명 이상은 이혼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인 것으로 추정된다(정현숙, 유계숙, 2001: 527-528).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늘어나고 독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졌고, 결혼을 일종의 계약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파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신세대가 많아지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 등으로 부부 상호간 의존의 필요성이 약화되었으며, 가문이나 제도적 규제의 약화(유영

주, 김순옥, 김경신, 2000: 299)로 인하여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의식이 달라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자녀양육이나 가사분담 문제, 장모·사위간의 갈등 등의 달라진 가정의 가치관도 이혼을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년 이혼도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 인구동태 통계연보에 의하면 결혼 15년 이상 동거 후 이혼하는 비율은 전체 이혼건수의 25.9%를 차지하였고,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비중도 10.2%에 달하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의 여성 이혼율이 31.6%, 50세 이상의 이혼도 6.4%나 되었다.

이혼으로 인한 재혼의 영향도 심각하다. 2000년 한해 결혼한 쌍 중 1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에는 금기시되었던 재혼 여성과 초혼 남성의 재혼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재혼한 이혼녀 중 34.6%는 총각과 결혼하였다(조선일보, 2001. 7. 2). 이는 여성의 재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부장적 체제에 근거한 결혼 제도가 개인의 선택과 남녀평등을 중시하는 결혼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사회도 여권이 상당히 신장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모나 계부와 함께 사는 아동들의 스트레스와 해당 부모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혼 가족의 경우 부부문제 외에도 계부모, 계자녀 관계, 재산문제 등 초혼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들 문제를 다루는 정부조직이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사회적으로 재혼남녀에 대한 편견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재혼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재혼 가족은 새로운 가족에 적응해야 하는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미비에 따른 어려움, 재혼 당사자들이 이혼을 갈등의 해결책으로 쉽게 생각(Furstenberg & Spanier, 1984)하며, 재혼자들이 심리적으로 행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Brody, Neubaum, & Forehand, 1988) 때문에 재이혼에서의 이혼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이혼·재혼은 가족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여러 가지 가족 문제 및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상담·치료 프로그램의 실시와 해당 가정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며, 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사회, 국가적 지원체제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이혼·재혼자들의 심리, 정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기관,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를 비롯한 경제적·의료적 지원, 대인관계와 이혼·재혼 조정을 위한 장치, 이혼·재혼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기관 및 조정과 중재기관, 종교기관, 법률부조기관, 변호사,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등 각종 사회적 지원체계의 활성화 방안과 전문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그리고 이혼하거나 재혼한 사람들간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간의 공유되는 감정을 교환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외에도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다양한 사이트의 개설로 인한 동료의식의 형성, 다양한 정보 공유, 이를 통한 그들만의 유대의식의 강화 등이 새로운 사회적 지원체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섯째, 급속한 선진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의 증가이다.

최근 5년간 청소년 범죄는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범죄 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한해 발생한 전체 강도범죄의 48%가 청소년들에 의한 범죄이고 이들의 평균연령도 16.8세로 나타났다(KBS 뉴스 2001. 7. 10). 청소년 백서(2000)에 나타난 이들의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27.1%)가 가장 높고, 실부모가 있는 경우(73.2%)가 대부분이어서 이 시기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화, 다변화로 인한 물질만능주의, 도덕감 상실, 향락풍조의 만연 등으로 범죄사범 중 청소년들의 향정신성 약품 등의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일반 범죄와 더불어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성매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여고생이 성매매 가게부를 작성하여 활동해온 결과가 매스컴에 보도(중앙일보, 2001. 8. 20)되었는가 하면, 여중생이 나이든 사람을 소개하여줌으로써 중간에서 돈을 갈취하는 등 청소년의 성범죄도 점차 하향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사회 청소년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한 수위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KBS 뉴스, 2001. 8. 30). 특히 강제 추행자의 80%가 13세 미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20대에서 40대가 89%로 나타났으며, 2, 3세에 대한 성폭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에 비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실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서 이들의 보호를 위한 구호만 외치고 있을 뿐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장비의 마련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 소년원생에 대한 약물남용 치료, 재활 프로그램 마련, 일반상담과 사이버 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보호 소년·소녀들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보호 가정의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놀이 공간의 마련, 현실적인 성교육 및 예비 부모교육의 실시,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장의 마련, 지나친 학력위주의 사회 풍토 개선 등을 통해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회노인복지정책연구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2000). 노인복지정책관련 국민대토론회.
- 문화관광부(2000). 청소년 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박경란, 이영숙, 전귀연(2001). 현대 가족학. 서울: 학지사.
- 박영란(2001). 노인부양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두섭(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 복지(pp. 485-510).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박재간(2000). 노인문제의 현황과 과제. 노인복지정책관련 국민대토론, 13-28.
- 박재간 외편(1995). 고령화 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2000).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학지사.
- 조성연(2001).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됨의 교육. 서울: 동인문화사.
- 통계청(2001). 통계로 보는 한국의 모습. 서울: 통계청.
- 한국여성개발원(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계청, KBS, MBC, SBS 보도 자료 인터넷 검색.
- Brody, G., Neubaum, E., & Forehand, R.(1988). Serial marriage: A heuristic analysis of an emerging family form. *Psychological Family*, 103, 211-222.
- Furstenberg, F. F., Jr. & Spanier, G.(1984). *Recycling the family: Remarriage and divorce*. Beverly Hills, CA: Sage.